

## 집단에너지를 통한 지역난방보급 확대 지속 추진

- 김포양촌지구 등 7개지구에 대해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-

- 김포양촌지구 등 7개 지역이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통한 지역난방 보급이 더욱 확대될 전망임(‘06.8.28관보게재)

\* 집단 에너지공급대상 7개지구

: 인천영종지구, 평택소사별지구, 김포양촌지구, 화성향남2지구, 고양삼송지구, 순천신대배후지구, 광주하남3지구

※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은 집단에너지의 원활한 공급 및 열원시설의 이중 투자를 방지하기 위함이며,

동 지역에서 개별열원시설의 신설시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.(단, 학교·종교시설 및 단독주택용지는 제외)

\* 허가대상 :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보일러, 주택외의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20만Kcal이상의 보일러 등

- ‘06.8.28일 산업자원부는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이 있는 택지개발지구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약 13만9천호에 해당되는 7개 지구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음.
-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이 시작된 1987년 이래 총 101개 지구 중 95개 지구에 대해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선정되어, 2005년 12월 현재 약 139만호에 지역난방이 공급중에 있으며 이는 총 주택의 10.5%에 달하는 규모임.
  - 금번 고시된 7개지역 이외에도 금년 4월과 지난해 12월에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으나 아직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6개 지구(대전노은3지구, 수원광교지구, 운북복합레저단지, 육정부민락2지구, 대구금호지구, 대구옥포지구)를 감안한다면 향후 집단에너지 공급 규모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임
- 해당지구에서 집단에너지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동 공고에 따라 사업허가신청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하면 되고,
  -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의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신청할 경우, 산업자원부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후 집단에너지사업을 허가할 계획임
- 에너지의 97% 이상을 수입하고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,
  - 집단에너지는 열병합발전소, 자원회수시설, 산업공정용폐열 등 대규모 에너지생산시설이나 미활용에너지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‘열과 전기’를 공급함으로써
  - 에너지이용효율향상에 따라 국가에너지절약에 기여함은 물론, 오염물질 배출감소로 대기환경개선에도 이바지하고 있음

(문의 : 산업자원부 에너지 관리팀 02-2110-5442)



## 제주도에도 LNG 공급

- 해저연계선 증설 및 LNG발전 병행 추진으로 정전걱정 사라진다! -

-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월 23일(수) 당정협의를 통해 제주도의 전력공급 방안으로 2011년까지 해저연계선을 추가 증설하고, 이후 LNG 발전소를 건설키로 하여, 제주도에도 LNG가 공급될 전망임
  - 이로써 해저연계선의 고장으로 찾은 정전사고<sup>\*</sup>를 초래했던 제주도의 전력공급안정성이 근본적으로 대폭 개선될 전망임
    - \* 연계선 고장에 따른 제주정전(‘97~현재) : 총 31건 (제주도 전역정전 4회)
  - 또한, 전국 16개 시·도중 유일하게 LNG 공급이 제외되었던 제주도에도 드디어 LNG 도시가스가 공급될 전망임
- 산업자원부는 한국전기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제주도 전력공급 대안으로 세가지 안을 마련하여 대안별로 전력공급 안정성과 경제성과 등을 분석하였음
  - [1안] : 해저연계선 증설방안
  - [2안] : LNG 발전소 건설방안(LNG 도시가스 공급 포함)
  - [3안] : 해저연계선 증설 및 LNG발전소 건설방안  
(LNG 도시가스공급 포함)
- 연구용역에 따르면 해저연계선 증설방안(1안)이 경제성 측면에서는 유리하나, 비용이 다소 높은 병행추진안(3안)과의 소요비용 차이는 4% 내외 수준으로 분석됨
- 공급안정성 분석결과, 해저연계선 증설방안(1안), LNG 발전안(2안)은 현재의 공급신뢰도 수준으로 해저연계선 2회 선 연계고장 등의 경우에는 정전이 불가피한 공급방안임
- 병행추진안(3안)은 금년 4월 사고와 같은 해저연계선 2회선 연계고장 등의 열악한 경우에도 정전을 예방할 수 있는 육지 수준의 높은 공급신뢰도를 지닌 방안임
- 또한, 병행 추진안(3안)의 경우에도 전기사업자 등의 제주도에서의 손실규모는 현재보다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됨
  - 중유, 경유 등 고비용 위주의 발전체계로 인해 현재 한전은 제주도에서 연간 1,600억원 규모(‘05년)의 손실을 입고 있음
  - 병행 추진시에는 연계선 증설을 통한 육지전력 구입확대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LNG 발전으로 인해 사업자의 손실 규모는 다소 줄어들 전망임(연간 1,500억원 수준)
- 다만,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주도 차원의 LNG 발전소 및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공식적인 의사결정(도의회 의결)을 전제로 추진키로 하였음
  - 그동안 제주도는 LNG 도시가스 공급을 도 차원의 숙원사업으로 삼고 제주도와 다수의 사회단체 명의로 LNG 발전과 도시가스 공급을 건의하여 왔음
  - 한편, 연구용역에서는 LPG에 비해 저렴한 LNG 공급시 제주도민은 LPG 난방에 비해 30년간 총 900억원 이상의 난방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함
- 한편, 어제 오후에는 지난 4월 1일, 2시간 이상 제주도 전역정전을 초래했던 사고의 최종 조사결과가 발표<sup>\*</sup>됨
  - \* 정전사고 합동조사반장 : 박종근 서울대 교수
  - 사고원인은 2개 해저연계선중 외부충격으로 1개 선로가 손상된 후 기기 이상으로 고장이 파급되어 2회선이 동시에 장난 것으로 밝혀졌는데,
  - 병행추진안(3안)은 4개 연계선로중 2개 선로를 예비선로로 활용함으로써 2회선 동시고장시에도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하여, 이러한 광역정전사고가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됨

(문의 :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 02-2110-5474)

## 하반기, 주요 산업 수출 증가세 지속 전망

- 반도체 최초 연간수출 300억불, 조선 200억불 돌파 전망 -
- 다만 내수회복세는 당초 기대에 못 미칠 전망 -

### ■ 산업자원부는 조선, 반도체, 일반기계 등 12개 주력산업에 대한 「2006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」 조사·분석 결과를 발표

- \* '06.7.12~8.20, 해당 생산자 협회·단체를 통한 조사결과를 분석
- '06년 주요 산업의 생산 및 수출은 당초 전망('06.1월) 수준을 달성할 전망이나 내수는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당초전망 수준에 다소 못 미칠 것으로 예상
- 상반기에는 원화절상·유가상승 등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, 수출증가세가 지속되어 조선, 반도체 등 수출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양호한 생산증가세 시현
- 하반기에는 양호한 수출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, 하반기 경기 둔화로 인한 내수 회복세 약화로 상반기에 비해 생산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

### ■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, 수출의 지속적인 증대 및 투자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

#### ① 환율 하락, 고유가, 원자재난 등 기업의 당면 애로해소 총력 지원

- 환변동보험 공급확대(15조→20조), 수출증기 특별자금(2조원) 신규 공급,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등을 통해 수출 채산성 악화 해소
- 중소기업 원자재 구매자금 조기 배분(1,046억원) 및 기초원자재 無稅화를 통한 원자재 부담 완화
- 고유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자금지원 확대 및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로 전환 지원 확대

#### ②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업 환경 조성 및 관련 제도 개편

- 창업활성화를 위한 법인·공장설립절차 대폭 간소화 추진
- 기업의 투자 애로로 제기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·대안 마련 및 기업조직 유연성 제고를 위한 유한책임 회사, 합자조합 등 新회사제도 도입 등 기업제도 개편 추진
- 투자·R&D·中企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연장('06년말→'09년말) 및 '06년말 일몰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검토

#### ③ 산업구조 고도화로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

- 혁신형 중소기업 및 부품·소재산업 육성을 통해 국내산업의 허리 강화하여 中企 전반의 활력 제고 및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
- 제품의 고부가치화 및 차세대 성장동력산업,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등 신성장 분야 육성강화를 통해 산업의 경쟁력 강화 추진

(문의 : 산업자원부 산업정책팀 02-2110-5116)